전주시의회 의원 8명, 5분 발언 잇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치매 예방 핵심인프라 · 전주 명품버스 재설계 · 평화1동 주민센터 활용 방안 마련 등 제안

이남숙 의원

김동헌 의원

김정명 의원

김윤철 의원

최명권 의원

장재희 의원

천서영 의원

김세혁 의원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역 치매 예방의 핵심인프라로 거듭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치매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조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교육에 치매예방과정을 정례화하고 노노케어 사업에 치매 예방활동 연계, 치매예방 강사 노인 일자리 등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은 전주 명품버스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명품버스는 노후화와 잦은 고장, 기능 혼재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관광 중심 순환노선 재편, 전용 디자인과 다국어 안내 강화, 호출형 교통 도입 등 전면적인 재설계로 전주의 대표 관광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주민센터 활용 방안 마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주민센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생활문화센터나 창업공간, 돌봄시설 등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한옥마을 복합관광센터 조성과 이에 따른 주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제1주차장 부지에 복합센터를 조성하되, 공사 중 주차장 폐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제4주차장 셔틀버스 강화, 단계적 공사 추진을 통한 일부 주차 기능 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차별 없는 양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내국인의 30% 수준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따라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미등록 외국인 가정 아동까지 포함하는 등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서곡3길·4길의 가로수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가로수 뿌리가 지하 기반시설까지 침투해 보행 안전과 오수 역류 등 10년 넘게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은 가로수 전면 제거와 지상 시설물 정비를 병행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의 과도한 개입 지양을 당부했다. 천 의원은 "협의체 구성은 법률에 따른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주는 각 주체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절차 지원과 갈등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대중교통 청소년 정기권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K-Pass 도입 이후 청소년 요금보다 청년 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4만1000원 수준의 청소년 전용 정기권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도심 속 정원' 금암분수광장

전주시, 시민정원사 100여명 참여 산책로 조성 · 정원식물 식재

전주시 금암동 금암분수광장이 시민정원사의 손길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시민정원사 100여 명과 함께 금암분수광장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원식재 리뉴얼을 추진한 '초록볼론티어 식재행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생활 속 녹지공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금암분수광장을 정비해왔다.

특히, 새롭게 단장된 금암분수광장은 시민정원사들이 공간 구성과 식재 방향 설정 등 정원 디자인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이와 관련 16일 열린 식재행사에는 시민정원사들이 참여해 초화류 및 관목 등을 직접 식재하며 정원 리뉴얼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새롭게 조성된 금암분수광장은 '초록정원관리사'를 중심으로 유지관리될 예정으로, 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원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원 기획부터 조성까지 참여한 만큼 공간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피지컬AI 산업 키운다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1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조용로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지컬AI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회장 조용로)와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1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조용로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법인으로, 현재 328개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피지컬AI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정책 제안, 기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과 제조·로봇·물류 등 실물 산업이 융합되는 '피지컬 AI' 분야의 성장에 대응하고, 전주시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 △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 정보 공유 △지역내 유망기업 발굴·육성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등 피지컬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피지컬AI-J벨리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제1회 인공지능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26~2030년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과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기술개발·실증·인재 양성 등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며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피지컬 AI는 미래 제조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를 피지컬AI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3개 정비구역 지정 후보지' 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정비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백동로인근 재개발, 송천 롯데 1·2단지 재건축, 한양·신일 재건축 등 3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덕진구 인후동2가 1565-24번지 일원의 백동로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13만648㎡)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의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3만3055㎡) △완산구 효자동2가 635-1번지 일원의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3만4001.4㎡)의 총 3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된 곳이다.

시는 그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봄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이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지하수)과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해 발생하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 등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구토·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 및 출근 자제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 구분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것 등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